

민주, 야권 공조로 '쌍특검·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50억 클럽'은 정의당 발의 법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법안 이태원특별법, 야 3당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쌍특검 중재안'을 야권에 제안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3당과 협의에 나서는 등 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

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30일에는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대신 법안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했고, 그 부분을 존중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적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야당 공조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고,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특별법안 발의를 공동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조사기구 독립 설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

정과 행정 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추모공간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부총리·농림장관, 양곡법 거부권 건의 윤 대통령 "의견 존중... 숙고 후 결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8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고 받은 뒤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 당장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



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양곡 매입단가는 1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 재정에 큰 손해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정부가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 안정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기재부도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전락작물 직불제 도입 등 그간의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쌀 가격 하락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美 핵 함모 '니미츠' 부산 입항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 68·10만톤급)가 28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가운데 함모 갑판 위에 각종 함재기와 승조원이 도열해 있다. 길이 332.8m, 폭 76.8m, 승조원 6000여 명 규모인 니미츠함은 F/A-18F 슈퍼호넷 등 함재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뉴스스

尹 "과감하게 투자... 세금 한푼도 낭비 않도록"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재정총량 관리... 건전 재정 기초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초를 견지하겠다"며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난해와 같이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투자자와 경제체질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는 투자한다.

이 같은 재정운영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과 학기술 혁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반대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재정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혁신 항목으로 삼았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 중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재정지출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 외부적 사업 등에 투입될 재원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32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재량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축 대상은 아니다.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소요 예산을 제외한 100조~120조원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10조~12조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감축과 함께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반복 수급 등 복지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野, 교육위서 '정순신 아들 위장전학 의혹'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전학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강민정·서동용·문정복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10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순신 자녀는 집행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전에 돌입하며 차일피일 전학을 미뤄온 사이 피해 학생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

라고 말했다. 이들은 "위장 전학이 서울시 교육청의 배정 취소로 미수에 그쳤으나 정순신 부부가 왜, 어떻게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은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정 변호사가 오는 31일 예정된 교육위 청문회에 출석해 논란들을 날달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변호사가) 출석할 결과 기대하고 있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